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한 노인빈곤 결정요인 분석

박미영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Determinant of the Elderly Poverty Using Decision Tree Analysis

Mi-Young Park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aeg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6차 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와 같은 노인의 개인적 특성, 거주지역, 가족 구성 형태와 같은 노인가구의 특성, 근로소득 유무, 임금근로자 여부와 같은 노인 근로적 특성, 그리고 공적연금수급 여부, 사적연금수급 여부, 사회보장급여수급 여부, 부동산 소득 여부, 개인연금형태 수입 여부와 같은 은퇴 후 근로 외의 발생소득 특성을 노인빈곤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6차 년도 조사대상 5,254가구 중 65세 이상 그리고 노인가구를 분류한 후 결측값이 포함된 것을 제외한 총 3,418명이 분석에 활용하였다.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근로소득 유무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없는 빈곤노인의 경우 공적연금수급 여부, 교육수준, 거주지역이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빈곤노인의 경우 임금근로자 여부와 성별이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Senior re-employment 노동환경 조성, 무료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공적연금 수급 확대 및 미래연금수급 안전성 보장 및 강화 차원의 현행 연금제도 개선 필요성, 여성 노인 우선적 고용 및 임금근로 조건에 의한 노인 고용 업체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노인빈곤, 개인적 특성, 가구적 특성, 근로적 특성, 은퇴 후 근로 외의 발생소득 특성, 의사결정나무분석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the elderly poverty by using the Decision-tree analysis. In line with this perspective, this study includes individual characteristics, family characteristics, working characteristics, and periodic income characteristics after retirement as determinants for senior poverty. The study uses data from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based on panel survey and employs the Decision-tree analysis to explain the causes of the elderly poverty. As the result of analysis, earned wage has the greatest effect on the elderly poverty. Depending on status of the earned wage, there are 2 different variable groups. One with no earned wage includes public pension, education, and residence, paid employee and gender in the other with earned wage.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s, the study suggests measures to address the elderly poverty.

Key Words : The Elderly Poverty, Individual Characteristics, Family Characteristics, Working Characteristics, Periodic Income Characteristics after Retirement, Decision-tree analysis

1. 서론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서 인구의 고령화는 그 정도가 더 심해져 우리 사회를 위협에 빠뜨릴 가능성이 큰 심각한 문제이다. 인구의 고령화는 한국사회

가 지고 가야 할 숙명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여러 분야에서 한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노인의 소득원 상실에 따른 빈곤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절대적 위협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Corresponding Author : Mi-Young Park(klm0188@nate.com)

Received June 18, 2018
Accepted July 20, 2018

Revised July 2, 2018
Published July 28, 2018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2016년 기준 53.3명으로 전체 인구 자살률의 2배이며, OECD 국가 노인의 자살률의 3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1]. 이는 비단 노인의 소득상실로 인한 빈곤과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고령화로 인해 60세 이상 가구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명목 가계소득이 평균대비 30% 이상 감소함에 따라 소득절벽을 경험할 고령 인구의 가구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2].

노인의 빈곤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노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노인의 소득지출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식료품 구입 비용, 주거비용, 의료비용임을 고려할 때[3], 빈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삶을 영위하는데 위협적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2000년 한국사회가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면서, 정부는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사회적·국가적 문제 해결에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정부는 노인의 빈곤 완화를 위해 2007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시행에 대한 다양한 시각적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사회가 일시적으로 갈등과 대립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제도는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그간의 관련 선행연구들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논의해 왔다.

무엇보다도 주요 연구적 관심[4-7]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노인 빈곤감소 효과 여부에 있었다. 연구결과,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노인의 빈곤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지만 그 반대의 주장도 존재한다. 기초노령연금이 노인의 빈곤 완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을 것이다.

노인 빈곤과 관련하여 볼 때, 노인 빈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도 빈곤감소를 위한 연구적 노력만큼 의미 있는 것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하지만 노인 빈곤 원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한 실정에 있다.

초기 노인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8,9]는 주로 노인빈곤 실태를 분석한 수준에 있다. 이런 연구는 노인빈곤의 심각성을 보여주는데 기여하였지만, 노인빈

곤의 원인을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그나마 노인빈곤 원인을 과학적·경험적으로 검정하고자 한 연구[10]가 이루어졌는데, 이 연구가 노인빈곤의 원인변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지적과 횡단면적 연구로 인해 시간적 변화에 따른 독립변수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11].

이후 일부 연구[11]에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더 많은 원인변수를 반영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종단면적 혹은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빈곤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지나치게 가구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역점을 두으로써 노인빈곤의 원인을 가정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에만 국한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노인빈곤 원인을 확장한 연구[12,13]들이 진행되었는데, 이들 연구는 특히 가정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노동적 요인을 연구모형에 포함하였다. 하지만 노동적 요인에 대한 충분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연구의 분석 수준이 미시적 요인 규명에 머물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노인빈곤 원인을 중범위적 요인 및 거시적 요인과 시간적인 변화를 반영한 연구[14]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연구는 독거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노인빈곤의 원인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빈곤 원인을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그간에 언급된 노인 빈곤의 원인을 확장하여 규명해 보고자 한다. 즉 그간에 다루어진 노인빈곤 원인을 확대 및 추가하여 개인적 특성, 노인가구의 특성, 노인 근로적 특성, 은퇴 후 근로 외의 발생소득 특성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6차 년도(2015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시간적 변화를 반영하고자 한다.

이런 본 연구의 노력은 선행연구가 지닌 한계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노인빈곤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 비해 차별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2. 선행연구 검토

노인빈곤 원인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이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하는데 역부족한 실정이다. 우선 국외 연구를 보면, 노인빈곤 원인으로 동

거가구의 성격[15] 즉 동거가구의 경제활동 여부, 독거 혹은 부부 노인 여부 등이 언급되어졌다. 가구의 자산, 거주 도시유형도 노인 빈곤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15,16]도 설득력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노인 빈곤의 원인을 노인의 개인적 특성 즉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건강상태 등에 역점을 두고 이루어졌음은 분명한 것 같다[17-19].

국내 연구도 국외 연구와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노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건강상태 등은 노인빈곤 원인으로써 공동으로 다루어지고 있다[10-14]. 또한 거주 도시유형, 가구주의 노동 여부, 노동 직종 등과 같은 가구의 특성[10-13]뿐만 아니라 소득 유형, 자산, 공적연금수급 여부 등과 같은 노동 외의 소득 발생과 관련된 요인 [13,14]들이 노인빈곤의 결정요인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이상과 같은 노인빈곤 원인에 관한 연구들의 결과를 요약 정리해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혼자 살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노인의 빈곤율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대도시에 살고, 가구 구성원의 근로가 적을수록, 육체적 노동 중심의 직종에 종사할수록 노인의 빈곤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 소득 및 금융소득이 없을 때, 사회보장급여수급이 없을 때와 같이 노후 노동 외의 소득이 없을 때 빈곤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변수 선정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노인빈곤 원인을 선정하였다. 첫째, 노인빈곤은 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65세 이상), 교육수준(중등교육, 고등교육), 건강상태(나쁨, 좋음)를 포함하고자 한다. 둘째, 노인 가구의 특성도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거주지역(대도시, 중소도시), 가족 구성 형태(배우자, 배우자+손자녀, 1인 단독가구)를 노인가구의 특성 변인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셋째, 노인가구의 근로적 특성이 노인빈곤과 직접적인 상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근로소득 유무, 임금근로자 여부를 선정하고자 한다. 끝으로, 은퇴 후 근로 외의 발생하는 소득의 여부에 따라 노인빈곤이 달라짐을 고려할 때, 공적연금수급 여부, 사적

연금수급 여부, 사회보장급여수급 여부, 부동산 소득 여부, 개인연금형태 수입 여부를 포함하고자 한다.

독립변수와는 달리, 노인빈곤이라는 종속변수에 대한 정의와 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리 쉬운 것 같지 않다.

홍경준(2004)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할 경우 소득의 과소보고 문제가 있어 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보다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면 이를 빈곤으로 간주하였다[20,21]. 최옥금(2009)은 이들의 주장을 근거로 가구의 총소득을 균등화 지수로 조정한 균등화 소득을 활용하여 중위소득을 구한 다음 이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는 소득을 빈곤선으로 정의하였다[11].

홍백의(2005)는 4인 가구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 빈곤개념을 이용하여 빈곤자와 비빈곤자를 구분하였다. 이때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OECD의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가구 균등화 지수를 이용하여 가구소득을 조정하였다. 즉, 가구 규모를 조정한 가구소득이 해당 가구의 빈곤선보다 적으면 그 가구의 모든 구성원은 빈곤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10].

황명진(2016)은 노인 빈곤을 보건복지부가 소득을 기준으로 제시한 공식적인 기초생계인 빈곤선을 사용하여 빈곤의 여부를 측정하였다[14].

본 연구는 최옥금(2009)과 홍백의(2005)의 노인빈곤의 판단기준인 가구의 총소득을 균등화 지수로 조정한 가구 균등화 소득을 활용하여 중위소득을 구한 다음 이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는 소득을 빈곤선으로 정의하고 이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상의 노인빈곤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변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Table 1. Factors and Variables for the Research

Factors	variables
Individu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female ·Age: 65-70, 71-75, 76-80, over 81 ·Education: secondary, higher ·Health: bad, good
Family Characteristics	·Residence: big, small-medium ·Family: spouse, spouse+grandchildren, living alone
Wage Earning	·Earned wage: yes, no ·Paid employee: yes, no
Other Income	·Public pension: yes, no ·Private pension: yes, no ·Social Security: yes, no ·Income from immovables: yes, no ·Income from other pension: yes, no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2.1 자료수집 및 분석자료의 특성

본 연구는 노인빈곤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6차년도(2015-2017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6차년도 조사대상 가구는 5,254가구였다. 이 중에서 65세 이상 그리고 노인가구를 분류한 후 결측값이 포함된 노인가구를 제외한 총 3,418명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성별의 경우 남성 1,812명, 여성 1,605명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65-70세 1,730명, 71-75세 979명, 76-80세 550명, 81세 이상 159명으로 65-70세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중등교육 이하 2,870명 그리고 고등교육 548명으로 학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의 경우 나쁨 1,207명, 좋음 2,211명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역의 경우 대도시 768명, 중소도시 2,650명으로 대부분 시군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은 배우자 2,473명, 배우자+손자녀 85명, 1인 단독가구 860명으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이 대부분이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이 579명, 없는 노인이 2,839명으로 대부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근로자가 943명이고 비임금근로자가 2,475명으로 파악되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Observation (N=3,418)

Characteristics		n	Characteristics		n
Gender	male	1,812	Earned wage	yes	579
	female	1,605		no	2,839
Age	65-70	1,730	Paid employee	yes	943
	71-75	979		no	2,475
	76-80	550	Public pension	yes	1,301
	over 81	159		no	2,117
Education	secondary	2,870	Private pension	yes	14
	higher	548		no	3,404
Health	bad	1,207	Social security	yes	2,934
	good	2,211		no	484
Residence	big	768	Income from immovables	yes	3
	small-medium	2,650		no	3,415
Family	spouse	2,473	Income from other pension	yes	9
	spouse+grandchildren	85		no	3,409
	living alone	860			

은퇴 후 근로 외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공적연금수급자가 1,301명이고 비수급자가 2,117명으로 나타났으며, 사적연금수급자는 14명 그리고 비수급자는 3,404명으로 조사되어 연금수급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사회보장급여수급자가 2,934명으로 비수급자 484명에 비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으로부터 소득이 있는 노인 3명, 기타 개인연금 형태의 수입이 있는 노인 9명으로 나타나 근로 외 소득발생원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2 분석방법

본 연구는 노인빈곤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의사결정나무분석은 각 자료 내에 존재하는 관계와 규칙을 탐색하고 찾아내어 나뭇가지 모양의 나무구조로 도형화하여 분류모형을 제공하는 분석기법이다. 이 분석기법은 관측치의 선형성,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비모수적인 방법이다. 특히 의사결정나무분석은 대용량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패턴, 관계, 규칙 등을 규명하여 모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지식과 정보를 추출하는데 유용한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21].

본 연구에서 의사결정나무모형의 알고리즘은 CHAID를 이용하며, 노인빈곤이란 목표변수가 이산형으로 측정되었기에 카이제곱-검정을 수행할 것이다. 모형 추정 최대 반복계산 수는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5000번으로 설정하였다. 트리 깊이를 나타내는 최대수준 수는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그리고 최종노드의 최소수준은 6으로 설정하였다. 대표본이라 상위노드와 하위 노드의 숫자는 각각 100과 50으로 설정하였다. 노드 분할에서 유의수준은 5%, 기준은 Person 카이제곱 통계량을 이용하였으며, SPSS 21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3 분석결과

6차년도(2015-2017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의사결정나무모형의 통계적 진단을 보면, 모형의 적합도를 의미하는 분류의 전체적인 정확도 83.5%, 오분류가 나오게 될 위험도를 의미하는 추정값 0.165, 표준오차 오류 0.006으로 나타나 의사결정나무모형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모형의 과적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훈련데이터와 검정데이터를 구분하여 분할표본 타당성 검사를 실시하

였다. 전체표본 중에서 훈련데이터 70% 그리고 검정데이터 30%로 설정하고 임의할당방식을 활용하여 표본추출을 실시한 결과, 훈련표본의 평균 위험도와 표준오차오류가 0.166과 0.022로 나타났으며, 검정표본의 평균 위험도와 표준오차오류가 0.175와 0.034로 두 표본의 평균 위험도 차이는 0.009, 표준오차오류 차이는 0.012로 나타났다.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근로소득 유무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없는 노인의 경우(노드 '1'), 공적연금수급 유무가 노인빈곤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소득이 없는 노인 중에서도 공적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빈곤노인이 287명에 이른다. 공적연금수급 여부는 노인의 교육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노인 중에서 중등교육 이하가 259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빈곤노인은 133명으로 거주지역에 따라 빈곤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대도시의 경우 빈곤노인이 20명인데 비해 중소도시의 경우 113명으로 약 6배에 이른다.

한편,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노드 '2'), 임금근로자의 여부가 노인빈곤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가 아닌 빈곤노인이 104명이며, 이들 빈곤노인은 성별에 의해 빈곤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비임금 근로 빈곤노인 중에서 여성이 82명으로 남성 22명에 비해 약 4배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근로소득 유무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없는 노인의 경우인 노드 '1'과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인 노드 '2'로 분류될 수 있다. 노드 '1'의 경우, 노인빈곤의 원인에 공적연금수급 여부, 교육수준, 거주지역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결과에 토대로, 근로소득이 없는 노인이 공적연금수급이 없으면서 학력수준이 낮고 중소도시에 거주한다면 빈곤수준이 약화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에, 노드 '2'의 경우, 노인빈곤 원인에 임금근로자 여부와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거나 비임금근로자이면서 여성일 경우 빈곤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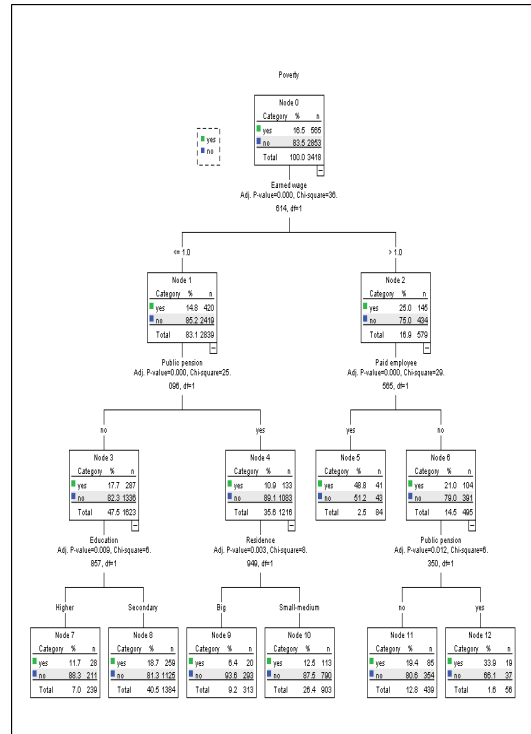


Fig. 1. Decision-tree Analysis on the Elderly Poverty

4. 결론 및 제언

4.1 연구결과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6차 년도(2015-2017년)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와 같은 본인의 개인적 특성, 거주지역, 가족 구성 형태와 같은 노인가구의 특성, 근로소득 유무, 임금근로자 여부와 같은 노인 근로적 특성, 그리고 공적연금수급 여부, 사적연금수급 여부, 사회보장급여수급 여부, 부동산 소득 여부, 개인연금형태 수입 여부와 같은 은퇴 후 근로 외의 발생소득 특성을 노인 빈곤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근로소득 유무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없는 빈곤노인의 경우 공적연금수급 여부, 교육수준, 거주지역이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빈곤노인의 경우 임금근로자 여부와 성별이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변인이 근로소득 유무로 나타난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은퇴 후 경제활동에 배제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이 저하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조차도 영위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바로 소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다. 이에 정부가 노인일자리 창출 및 기초노령연금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인빈곤을 해결하는데 역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평균 수명이 80대 초반이며 앞으로 수명이 더 연장될 것을 고려한다면, 건강한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임을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와 직업적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Senior re-employment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직, 기능직, 기술직 등과 같이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노동 수요를 은퇴한 노인으로부터 충당할 수 있도록 관련 노동법을 개정하거나 기업이 적극적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은퇴 후 제2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그리고 민간기업 주도 하에 나이 및 성별을 고려한 무료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공적연금수급 여부가 노인빈곤을 결정하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의 경우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노인이 중등교육 이하의 노인보다 훨씬 많았다. 현재 공적연금으로는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국민 연금이 이에 해당된다. 국민 연금을 제외하면 나머지 연금은 학력수준과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학력수준이 낮은 노인은 직업선택의 한계로 인해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어렵다는 사회제도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공무원, 군인 연금과는 상대적으로 성격이 다르지만,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노후 연금혜택을 받도록 국민연금 제도를 198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아직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조사에 따르면,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이 47.5%에 이른다는 사실은 이를 잘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 수급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명 연장에 따른 미래 연금수급 안전성 보장 및 강화가 매우 중요함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저부담-고급여의 형태라는 운영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재정적 불안정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연금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적 불균형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연금운영 미래예측 모델을 구축하여 연금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거주지역, 임금근로와 같은 취업형태, 성별도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더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경제활동을 위한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많은 노인이 임금근로자가 아닌 비임금근로자로 노동을 하고 있음은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나이가 들수록 여성노인의 빈곤상태가 남성노인에 비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는 노동과 신체조건 간의 상관성에 기인하는 문제로 보인다. 이로 인한 노인빈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도시의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소도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체가 여성 노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임금근로 조건으로 노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는 세금감면,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인빈곤은 정부의 능력만으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진다고 할 것이다. 빈곤한 노후생활을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양질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4.2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노인빈곤 결정요인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 첫째, 본 연구가 결정한 노인 빈곤선과 실제의 노인 빈곤 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을 포함한 모델을 구축하여야 했으나 그러지 못하였

다. 둘째, 변수를 지나치게 명목형 척도로 구성하여 변수가 지닌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분석이 어려웠다. 때문에 노인빈곤 원인변수에 관한 상세한 설명에 한계가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노인빈곤 원인에 관한 기존연구에 비해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가 지닌 한계 즉 실제적 빈곤선과 양적 변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을 수정·보완한 연구모형을 통해 노인빈곤 원인에 대하여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REFERENCES

[1]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418002600038/?did=1947m>

[2] T. W. Kim, J. W. Jung & J. M. Lee. (2015). A Study of Elderly Poverty and Depression: Focusing on the Multidimensional Concept of Povert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5(3), 71-102.

[3] S. H. Lee. (2015). Change i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Structure in 2015: Based on Effect of Increasing Elderly Population on Economy. *KB Knowledge Vitamin*, 15-19.

[4] S. H. Seok. (2010). An Analysis on the Anti-poverty Effectiveness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0, 335-352.

[5] J. E. Seok. (2010). Impacts on the Effectiveness and the Efficiency of Poverty Alleviation of Public Pension and Basic Old-Aged Pension: Seoul Metropolitan City. *Social Welfare Policy*, 37(3), 193-214.

[6] K. D. Nam. (2010). Korean Elders' Poverty and Basic Old Age Pension's Measures for Mitigating Their Poverty. *Welfare Administration Study*, 26, 235-260.

[7] S. H. Him. (2016). An Analysis on the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Basic Pens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36, 82-97.

[8] H. G. Jung, J. A. Jo, H. Y. Oh, G. J. Byeon & S. H. Moon. (1998). *The 1998 Elderly Living Condition Survey*.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9] H. S. Choi & Y. K. Ryu. (2003). A Study on the Levels, Trends, and Composition of the Old-Age Poverty in Korea.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3(3), 143-160.

[10] B. E. Hong. (2005). Factors Influencing the 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7(4), 275-290.

[11] O. G. Choi. (2007). Factors Influencing Poverty of the Elderly: Utilizing the Panel Data Model.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9(1), 5-25.

[12] J. S. Choi. (2009). Study on the Cause and Improvement Measures of Poverty in Seniors.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3(1), 457-467.

[13] S. H. S & H. S. Kim. (2012). Determinants of Poverty in Elderly-Headed Households in Korea.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5(3), 99-124.

[14] M. J. Hwang. (2016). Determinant of Poverty among the Elderly Living Alone: Using Decision Tree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 Knowledge Information Technology Society*, 11(4), 351-358.

[15] D. K. McLaughlin & L. Jensen. (2000). Work History and US Elders' Transitions into Poverty. *The Gerontologist*, 40(4), 469-479.

[16] K. A. Rupp, A. Strand & P. S. Davies. (2003). Poverty among Elderly women: Assessing SSI Options to Strengthen Social Security Reform. *Journal of Gerontology*, 58B(6), s359-s368.

[17] D. K. McLaughlin & L. Jensen. (1994). *Poverty Dynamics among U.S. Elders: Implications of Occupation, Gender and Residence*.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1994 Meetings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18] R. B. Schiller. (2003). *The Economics of Poverty and Discrimination*. Prentice Hall.

[19] K. McGarry & R. F. Schoeni. (2005). Widow Poverty and Out-of-Pocket Medical Expenditures near the End of Life. *Journals of Gerontology*, 60, s160-s168.

[20] K. Z. Hong. (2004). Analyzing the Length of Poverty Spell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4, 187-210.

[21] H. J. Jin. (2010). Analysis for Consumer Groups Using Decision Tree Model: Focused on Tangerine Consumption. *Korea Agricultural Research*, 51(1), 19-40.

박 미 영 (Park, Mi Young)

[정회원]



- 2011년 8월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2015년 2월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과정 수료)
- 2018년 3월 ~ 현재 :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 관심분야 : 노인, 여성정책
- E-Mail : klm0188@nate.com